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31호 소개

□ 헌법판례동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토지세 부과를 위한 단일지가 평가 규정의 위헌성' 사건에서 1964년 이후 토지에 대한 가치 확정을 중단하고 있는 단일지가 평가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 행정에 적용되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시와 함께, 위헌으로 판명된 규범의 계속 적용을 두 단계에 걸쳐 명하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해외 대학의 학과 확인절차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 사건에서는, 문제되는 법적 관계가 행정법적 성격인지 사법적 성격인지에 대해 해당 규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독교인 제빵사의 동성결혼식 케이크 판매 거부' 사건에서는 동성커플의 결혼식 피로연을 위한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 상고인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었습니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논증은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남녀임금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 법률에서 임금의 소급지급을 불허한 조항의 위헌성' 사건에서 과거의 임금불평등에 대하여 보상받기 위한 요건을 정한 법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고령 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한 단체협약 또는 행동계획을 강제하는 규정이 1789년 인권선언 제8조의 형벌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사건은, 고령 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행동계획을 작성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법전 규정이 1789년 인권선언 제8조의 형벌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한 사건입니다. ‘수임자인 배우자는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때까지 소비한 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한 민법전 제1467조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합치하는지 여부’ 사건은 일반적인 수임자와 수임자인 배우자 간의 차별적 취급을 한 민법전 규정에 대해서 벨기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교사의 파업 지지로 인한 징계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징계에 있어서의 적법성 원칙의 적용사례를 살펴볼 수 있고,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타인 비방과 개인의 명예 보호’ 사건에서는 사인 간의 기본권 관련 보호소송과 재판소원을 통하여 기본권이 보장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남미의 에콰도르 헌법재판소와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에콰도르 헌법재판소에는 에콰도르 헌법, 비교헌법, 인권 및 에콰도르 헌정사 분야를 연구하고, 법조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헌법 및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헌법연구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18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동향을 모아 놓았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중국 통신원 소식으로 ‘중국의 제5차 개헌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실었습니다.